

[시민규제발굴단]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 후 타 시도로 이사해도 심사를 이어가는 절차 마련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25.1.3. 제9487호) 제4조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서울시민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등 지원요건을 정한다. 제5조는 주소지 보건소의 심사와 결정,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규정한다. ○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5.1.20. 제4677호) 제2조제2항은 구체적인 사항을 시장의 지원계획으로 정하도록 한다. ○ 2026년 1월 사업지침은 필요한 서류보완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보고, 의료이용 개시일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를 원칙으로 정한다. 전출 시 처리 기준은 지침 인쇄 33쪽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서울시 사업안내에도 지급완료일까지의 거주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제안배경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일용직 근로자,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의 입원 등 의료이용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을 쉬는 동안 생활비가 부담인 시민에게는 신청 후 자격을 확인받고 지원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중요하다. ○ 서울에 거주하면서 의료이용을 하고 신청과 서류보완까지 마쳤더라도, 심사가 끝나기 전에 다른 시도로 이사할 수 있다. 이미 접수한 신청을 유지하면서 남은 자격 확인과 심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출 후의 처리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절차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타 시도 전출 시점에 따라 신청 결과가 달라짐

서울 거주 중 의료이용과 신청, 서류보완을 마쳐도
전출 당시 조사 단계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짐

단계 1
신청과 서류보완 완료

단계 2
소득과 재산 조사

단계 3
지급

상황 A 조사 전 또는 조사 중에 타 시도로 전출



미선정 처리



신청 종료

전출 후 행복e음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처리

상황 B 조사 완료 후, 지급만 남은 상태에서 전출



전출 후에도 지급 가능

전출 직전 담당 서울 자치구 보건소가
e호조에 수기로 입력해 지급

같은 조건으로 신청했어도 전출 당시 조사 단계에 따라
심사를 이어갈 기회가 달라짐



서울 안 다른 자치구로 이사하면 신청 서류와 시스템을 이관해 처리

규제사항

- 현행 사업지침은 소득과 재산 조사 전이나 조사 중 타 시도로 전출하면 행복e음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미선정 처리하고 신청을 종료하도록 한다. 서울 안에서 다른 자치구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신청 서류와 시스템을 이관할 수 있다.
- 조사가 끝나고 지급만 남은 경우에는 타 시도 전출 후에도 전출 직전 담당 서울 자치구 보건소가 e호조에 수기로 입력해 지급할 수 있다. 이번 제안의 대상은 조사 전 또는 조사 중 전출로 심사가 중단되는 기존 신청이다.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서울 거주 중 의료이용과 신청을 마쳤다는 점이 같아도, 다른 시도로 이사할 당시 조사가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에 따라 심사를 이어갈 기회가 달라진다. 조사 전이나 조사 중인 신청은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전에 절차가 종료될 수 있다.
- 이를 개선하려면 기존 신청에 적용할 거주요건 예외와 전출 후 조사, 심사, 지급을 위한 근거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행복e음 이용 권한이나 기관 간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정비해 변경된 기준을 담당부서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선방안

개선 제안

제도 정비 후 적용

신청 후 타 시도로 이사해도 심사를 이어가는 절차 마련

기존 자격 검증은 유지, 이미 마친 신청은 최종 판단까지 진행

적용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기존 신청

- ✓ 의료이용 개시일 30일 전부터 전출 전까지 서울 주민등록상 거주
- ✓ 서울 거주 중 해당 의료이용
- ✓ 전출 전 신청과 필요한 서류보완 모두 완료

서류보완 완료일을 신청일로 적용

제외

전출 후 새로 발생한 의료이용
전출 후 신청이나 보완을 마친 건

담당기관

타 시도 전출 직전 신청을 담당하던

서울 자치구 보건소

서울 안에서 다른 구로 이사해 이관된 경우
→ 이관받은 구의 보건소

처리 흐름

1 기존 신청 유지

전출 후에도 신청을 종료하지 않고
담당 보건소가 이어서 관리

2 자격 조사

통합조사팀이 기존 기준으로 확인
소득과 재산, 가구 변동, 중복급여
확보한 자료 먼저 활용, 부족분만 보완
개인정보 이용 목적과 범위, 보유기간 명확화

3 심사과 결정

처리기한과 서류보완 기한 안내
담당 보건소가 기한 내 결정

4 결과 통지

지원요건 충족 → 지급

확인 불가 또는 요건 미충족
→ 미선정 사유와 이의신청 방법 안내

기대효과

생활비 지원 기회

의료이용 당시 서울 거주 시민의
신청을 최종 판단까지 진행

담당기관 명확화

이사 후에도 같은 보건소에서
진행 단계와 보완 자료 안내

서류 부담 완화

확보된 자료를 먼저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만 보완

시행 조건

거주요건 예외와 적법한 조사, 심사 및 지급 근거와 자료 확인 권한
마련 후 시행

- 의료이용 개시일 30일 전부터 타 시도 전출 전까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서울 거주 중 해당 의료이용을 했으며, 전출 전에 신청과 필요한 서류보완을 모두 마친 기존 신청에 한해 전출 이후 기간의 거주요건 예외를 마련한다. 서류보완 완료일을 신청일로 적용하며, 전출 후 새로 발생한 의료이용과 전출 후 신청 또는 보완을 완료한 건은 제외한다.
- 타 시도로 전출하기 직전 신청을 담당하던 서울 자치구 보건소가 기존 신청을 유지하고 심사와 결정, 결과 통지, 적격자 지급을 맡도록 한다. 서울 안에서 다른 구로 이사해 신청이 이관된 경우에는 이관받은 구의 보건소를 담당기관으로 정한다.
- 통합조사팀은 적법한 권한에 따라 조사 시점의 소득과 재산, 가구 변동과 중복급여 여부를 기존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미 적법하게 확보한 조사자료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료, 공적 증빙을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만 보완받는다. 개인정보 이용의 근거와 목적, 범위, 보유기간을 명확히 한다.
- 서울시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가 제도 정비를 총괄한다. 조례와 시행규칙, 지원계획, 사업지침을 검토해 거주요건 예외와 전출 후 조사, 심사, 지급의 근거를 정비한다. 행복e음 이용이나 전입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적법한 권한과 자료확인 경로를 확보한 뒤 시행한다.
- 담당 보건소는 심사 처리기한과 서류보완 기한을 안내하고, 정해진 처리기한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한다. 적법한 방법으로도 자격 확인이 어렵거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미선정 사유와 이의신청 방법을 함께 안내해 신청 처리를 마무리한다.

기대효과

- **의료이용 당시 서울에 살던 시민의 신청이 생활비 지원으로 이어질 기회를 지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용직 근로자가 서울에 거주할 때 입원하고 신청과 서류보완까지 마친 뒤 다른 시도로 이사한 경우, 개선 후에는 남은 조사를 거쳐 지원 자격을 판단받을 수 있다. 자격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이용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져 일을 쉬었던 기간의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치료로 소득이 줄어 생활비가 필요한 시민에게는, 이미 마친 신청이 이사 시점 때문에 중단되지 않고 최종 판단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 전출 당시 조사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심사 기회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현재는 조사를 마친 뒤 이사한 신청은 지급 절차를 이어갈 수 있지만, 조사가 진행 중일 때 이사한 신청은 종료된다. 기존 신청을 유지하면서 남은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면 두 경우 모두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흐름으로 연결되고 담당자도 시민에게 이사 당시의 조사 단계보다 실제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처리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 이사 후에도 시민이 문의할 기관과 보완할 자료가 분명해진다.

전출 직전 담당 보건소가 신청 기록을 이어서 관리하면, 담당자는 이미 확인된 내용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안내할 수 있다. 시민은 자신의 신청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보완하면 되는지를 같은 담당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먼저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는 방식은 이사 후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필요한 범위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 담당부서가 전출자의 신청을 최종 결정까지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다.

보건소의 신청 관리와 통합조사팀의 자격 확인, 결과 통지를 하나의 절차로 연결하면 각 단계에서 누가 무엇을 확인하고 마무리할지가 명확해진다. 신청인은 처리기한과 결과를 안내받고, 미선정된 경우에는 사유를 확인해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담당부서 역시 확인한 자료와 결정 근거를 남겨 이후 문의나 이의신청에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